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부채율 분석: 인구감소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김정숙

### 국문요약

이 연구는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의 추이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지역의 부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241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추이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모두 증가해 왔으며, 국가 부채에 비해 지방정부 부채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둘째, 2022년 기준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1유형과 2유형이며,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5만 이상 군인 6유형과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인 5유형, 5만 이상 군인 6유형, 5만 미만 군인 7유형은 2009년 대비 2022년에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원분산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구감소, 중간, 인구증가 그룹에 따라 부채 평균값이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1유형, 2유형, 6유형이며, 대부분 중간그룹이 가장 높은 부채 금액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인구감소, 지방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 유형

## I. 서론

한국의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김정숙·윤선일, 2022; 김정숙·한승혜, 2023; 윤석완, 2009; 정주원·이아라, 2022). 한국은 지난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총인구가 이때를 기점으로 감소하게 되었다(김정숙·윤선일, 2022).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을 우려하는 이유는 인구감소가 핵심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인 핵심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의 경우 가파른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인구감소가 곧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세수입이 확보된다는 선순환의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겪을 수 있는 재정위기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채무, 세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가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정책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구감소는 전체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경우 오히려 총인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내에서도 특히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여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지역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는 지역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지역 내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증가 지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인구감소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노후·유희시설, 산업단지 등 인프라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경제·재정적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을 갖는다. 첫째, 한국의 국가 부채와 지방 부채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 부채와 지방 부채 양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인구감소와 부채 간 연관성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인구감소 추세와 부채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이 공존하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부채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채 상황은 다른 지역(인구증가 또는 중간 수준)에 비해 실제 심각한가? 이다. 이는 현재 인구감소 지역의 부채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지를 실증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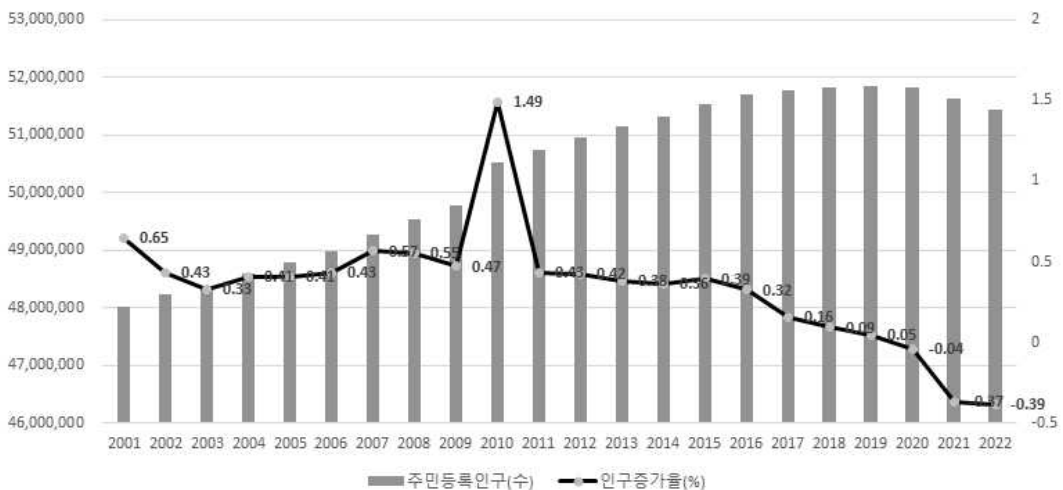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감소와 부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위의 3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째, 한국의 인구감소와 부채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구감소와 부채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한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부채 자료를 확보하여 인구와 부채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한국의 인구감소와 부채 현황

### 1. 한국의 인구감소와 부채 현황

한국의 총인구를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총인구는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총인구는 48,022,000명에서 2019년 51,850,0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51,829,000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최초로 마이너스(-)값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인구 수 감소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01-2022년 총인구수 및 증감률 변화



또한 국가 부채는 2001년 약 122조원에서 2022년 1,067조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부채를 GDP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지난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 부채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8.7조원에서 2022년 33.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절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 부채와 달리 지방 부채는 2002년-2003년, 2017년-2019년에는 부채액이 감소하였다. 국가 전체의 국세도 지난 2001년 95.8조원에서 2022년 395.9조원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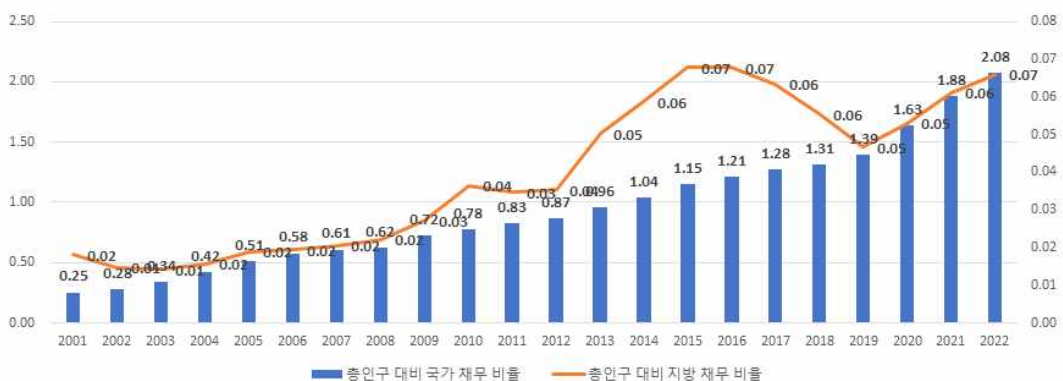
〈표 1〉 한국의 인구감소와 부채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인구 (1,000)	48,022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국가 부채 (천원)	121.8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per GDP (%)	17.2	17.0	19.8	22.4	25.9	28.1	27.5	26.8	29.8	29.7	30.3
지방 부채 (천원)	8.7	7.1	6.9	7.6	9.2	9.5	10.1	11.0	13.5	18.4	17.6
국세 (천원)	95.8	104.0	114.7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177.7	192.4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인구 (1,000)	50,948	51,141	51,328	51,529	51,696	51,779	51,826	51,850	51,829	51,639	51,439
국가 부채 (천원)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4
per GDP (%)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6	43.6	46.7	49.4
지방 부채 (천원)	18.0	25.7	30.1	34.9	35.0	32.8	28.7	24.2	27.5	31.5	33.9
국세 (천원)	203.0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는 절대액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인구 대비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총인구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및 지방정부 부채 비율을 살펴본 결과를 다음 〈그림 2〉의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총인구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및 지방정부 부채 비율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총인구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 2001년 0.25에서 2022년 2.08로 증가했으며, 총인구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01년 0.02에서 2022년 0.07로 증가하였다. 총인구 대비 지방정부 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 이후부터 예전과 비슷하게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2〉 한국의 총인구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및 지방정부 부채 비율



이러한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년 간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국가와 지방정부 경제 규모가 커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채의 규모도 커진 것 아닌가 반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GDP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해 국가 부채 규모가 더 많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20년 간 경제 규모보다 국가 부채가 더욱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 부채에 비해 지방정부 부채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2가지를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담당하는 기능 분야 내에서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서 국가 부채 내에는 중앙정부 회계 내 국고채가 증가하고 기금 내 차입금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 부채 내에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의 채권 및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지방정부 부채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분리된 조건 하에서 각 예산에 포함되는 일반회계 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기능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그리 커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적 장치인 '지방채발행한도제', 사후적 관리 제도인 '지방재정분석'을 운영하고 있다(한재명, 2022). 이러한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곳에 인센티브를, 방만하게 운영한 곳에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증감과 상관없이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했으나,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인구증감이 국가 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1)</sup> 또한 국가 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 둘 중 세출이 증가하거나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이제까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도 꾸준히 세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세출과 더불어 세입이 감소하는 이중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와 부채 현황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와 부채 현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하위 행정기관

1) 다만,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인구 증감과 국가 부채 및 지방정부 부채 간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계적 방법이 필요하다.

으로서,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의 인구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인구를 합산한 값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는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3유형은 50만 이상 시이다. 4유형은 50만 미만 시이다. 5유형은 도농복합시이다. 6유형은 5만 이상 군이다. 7유형은 5만 미만 군이다. 8유형은 특별시 자치구이다. 9유형은 광역시 자치구이다.

〈표 2〉 기초자치단체 유형

유형	대상	관측치
3유형	50만 이상 시	15
4유형	50만 미만 시	26
5유형	도농복합시	34
6유형	5만 이상 군	36
7유형	5만 미만 군	46
8유형	특별시 자치구	25
9유형	광역시 자치구	44

모든 기초자치단체 유형은 공통적으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해왔다. 다만 인구증가율이 (+)이거나 (-)인 차이로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우선 50만 미만 시인 4유형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증가율이 (+) 부호를 보이고 있어, 절대적인 인구 수는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유형이다. 반면 특별시 자치구인 8유형은 지난 2011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 부호를 보이고 있어, 2011년 이후 인구 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은 지난 2016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으로 (-) 부호를 보이고 있어, 2011년 이후 인구 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시 유형 중에서는 5유형인 도농복합시의 인구감소가 가장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군 단위는 6유형과 7유형 유사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7유형의 감소폭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의외로 특별시 자치구인 8유형과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증가율(평균)

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 (50만 이상 시)	2.27	1.56	2.21	1.03	0.86	1.05	0.85	1.10	0.86	0.51	0.87	0.70	0.08	0.06	-0.17
4 (50만 미만 시)	2.15	1.49	3.37	1.44	0.71	0.84	0.96	1.03	1.69	1.20	1.30	0.62	1.05	0.95	0.31
5 (도농복합시)	0.42	0.34	0.94	0.48	-0.11	0.23	0.30	0.50	0.26	-0.10	-0.25	-0.24	-0.86	-0.58	-0.24

6 (5만 이상 군)	0.32	0.18	0.83	0.10	0.10	0.67	0.57	0.63	0.35	-0.18	-0.83	-0.92	-1.01	-1.19	-0.39
7 (5만 미만 군)	-1.35	-0.38	0.46	0.04	-0.45	0.12	0.11	0.00	-0.42	-0.28	-0.99	-1.35	-1.69	-1.72	-0.70
8 (특별시 자치구)	0.18	-0.06	1.12	-0.45	-0.85	-0.64	-0.30	-0.71	-0.87	-0.67	-0.63	-0.43	-1.03	-1.88	-0.75
9 (광역시 자치구)	-0.04	0.07	1.06	0.33	0.13	0.19	0.26	0.02	-0.34	-0.70	-0.65	-0.45	-0.80	-1.02	-0.4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부채 현황을 광역자치단체인 1-2유형, 기초자치단체인 3-9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부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부채와 기초자치단체의 부채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황은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다르게 형성된다. 즉, 특별시 자치구인 8유형의 경우 별도의 부채가 없는 반면,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은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별도로 자치구만의 부채를 갖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인 1유형과 2유형은 모두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3-9유형은 모두 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속해있는 1유형은 가장 많은 규모의 부채액(평균)을 보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이 가장 적은 규모의 부채액(평균)을 보이고 있다. 한편, 50만 미만 시인 4유형과 도농복합시는 2009년 약 633억원, 약 663억원 대였으나, 2022년 50만 미만 시인 4유형은 약 98억원, 도농복합시는 약 240억원대로 큰 격차가 벌어졌다.

따라서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인 1-2유형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3-9유형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문제가 더욱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채무액(평균, 백만원)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특·광역시)	1,763,629	1,928,071	1,833,704	1,798,000	2,189,157	2,200,371	2,193,902	2,140,777	2,116,163	2,112,186	2,232,298	2,765,677	3,172,325	3,260,905
2 (도)	645,456	771,978	1,216,117	1,107,670	1,073,970	1,036,570	1,058,616	986,071	939,832	893,868	884,856	956,685	1,213,921	1,360,470
3 (50만 이상 시)	154,907	170,367	164,921	184,453	152,933	135,880	105,119	74,421	58,939	59,233	64,127	104,546	128,096	133,076
4 (50만 미만 시)	63,335	66,027	65,614	59,127	53,004	50,346	41,073	27,326	13,285	7,263	7,426	8,392	10,779	9,825
5 (도농복합시)	66,312	69,921	69,458	60,679	57,559	54,026	50,099	40,595	24,899	19,933	15,534	17,590	22,869	24,088

6 (5만 이상 군)	20,214	20,808	21,070	17,208	13,617	9,131	7,306	6,224	4,140	2,835	2,220	2,153	7,254	6,055
7 (5만 미만 군)	17,011	16,713	15,484	13,524	11,617	9,743	7,887	6,200	3,721	1,905	1,434	2,437	3,545	2,487
8 (특별시 자치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광역시 자치구)	6,705	7,043	6,988	6,566	5,761	5,223	4,423	3,807	2,632	2,098	1,276	1,330	1,880	1,935

### Ⅲ. 이론적 논의

#### 1. 인구감소와 부채 간 관계

인구감소를 다루는 정부의 시각은 명확하다. 인구감소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 중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인구 규모를 정부의 역량으로 보는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영철은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인구수, 업무 및 정책 등과 같은 지식, 의사소통 등의 기술, 행태의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2003). 또한 이승중·윤두섭은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으로 청년층 인구를 살펴본 바 있다(2005). 중앙정부는 국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인구 규모를 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와 같은 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자 해당 지역의 존속 자체를 의미하는 바로미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라고 보는 입장을 따르면(이승중·윤두섭, 2005; 최영철, 2003), 인구 규모가 작으면 경제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각종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이제까지 부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들은 인구 규모를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았다(정술·김정숙, 2023; 허명순, 2003; 황규선·권승, 2005). 즉, 인구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대비 지출 여력이 부족한 경우 부채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허명순, 2003; 황규선·권승, 2005). 이러한 실증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는 오히려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절대적인 인구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감소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비율, 잦은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과 함께 진행된다(윤선일·김정숙, 2022). 즉,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고령화비율은 결과적으로 낮은 생산가능인구 비율로 이어져 지역의 경제침체를 불러온다. 또한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 유출되는 인구의 연령대는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윤영진·김경도, 2012).

또한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필요한 연령대인 고령층의 비율이 증

가하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불러온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구감소는 세출 증가와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황규선과 권승(2005)은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부채, 사회복지지출, 정부총지출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sup>2)</sup>

다만, 인구감소가 국가부채와 지방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로 단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지방 차원에서는 동일한 시기에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구감소는 국가 부채와 지방 부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는 다른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부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된다(정술·김정숙, 2023). 사회·경제적 요인은 인구나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재정적 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익이나 이전재원으로 인해 지방비 매칭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정성호, 2013).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은 단체장의 재선 동기가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정술·김정숙, 2023). 부채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세입에 비해 세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입과 세출 간 관계와 부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도시의 경우 절대적인 부채 액수가 큰데, 이는 세입이 적다기보다는 세출이 늘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농촌의 경우 절대적인 부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데, 세출 자체가 크기보다는 세입이 너무 적어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산업, 공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 군, 구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특징을 지니고, 군은 농어촌의 형태를 갖추고 시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다. 또한 구는 대도시로 구성된 광역시나 특별시에 속한다. 시에는 인구 규모가 큰 차이를 갖기 때문에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50만 이상, 50만 미만, 도농복합시로 구분된다. 도농복합시는 시와 군이 통합한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혼합된 특성을 지닌다. 군의 경우 인구 5만을 기준으로 인구 5만 이상, 5만 미만으로 구분된다.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 따라 구분된다.

2) 이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인구감소를 정책문제로 다루는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실제 인구감소가 부채 증가 등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재정지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적 확인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수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종합하면 일괄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유형마다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증가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증가 지역에 따른 부채 규모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가설 3.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증가 지역 간 지방정부 부채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 IV. 연구 설계

### 1.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241개를 대상으로 인구, 지방정부 부채, 지방자치단체 유형 관련 자료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다만 지방정부 부채 자료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만이 확보되어 모든 자료를 동일한 기간 동안 분석에 담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분석 및 재정진단·분석을 실시할 때 활용하는 9가지 유형 구분 기준을 활용하였다.

〈표 5〉 각 변수 측정 및 출처

개념	측정방식	연도	출처	
총인구	주민등록인구	2001-2023	KOSIS	
인구증가율	$\{(\text{당해년 총인구} - \text{전년 총인구}) \div \text{전년 총인구}\} \times 100$	2001-2023	KOSIS	
부채	국가부채	2001-2023	KOSIS	
	지방부채	지방부채	2001-2023	KOSIS
		예산대비채무비율	2009-2023	KOSIS
국세	국세	2001-2022	KOSIS	
1인당 GDP	1인당 GDP	2001-2022	KOSIS	
지방자치단체 유형	3유형(50만 이상 시): 15, 4유형(50만 미만 시): 26, 5유형(도농복합시): 34, 6유형(5만 이상 군): 36, 7유형(5만 미만 군): 46, 8유형(특별시 자치구): 25, 9유형(광역시 자치구): 44	-	행정안전부	

###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시계열 추이 분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우선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율과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대비 지방정부 부채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은 3개 이상의 그룹

간 평균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방법으로서, 집단 간 차이를 밝혀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김영주·문명재, 2015; 김이경 외., 2009; 2012). 이 연구는 인구감소형, 중간형, 인구증가형 등 유형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세 유형에 따른 부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 V. 분석 결과

###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 대비 부채 비율 현황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2년 기준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1유형과 2유형이며,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은 5만 이상 군인 6유형과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인 5유형, 5만 이상 군인 6유형, 5만 미만 군인 7유형은 2009년 대비 2022년에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구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유형은 도농복합시인 5유형, 5만 이상 군인 6유형, 5만 미만 군인 7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 대비 채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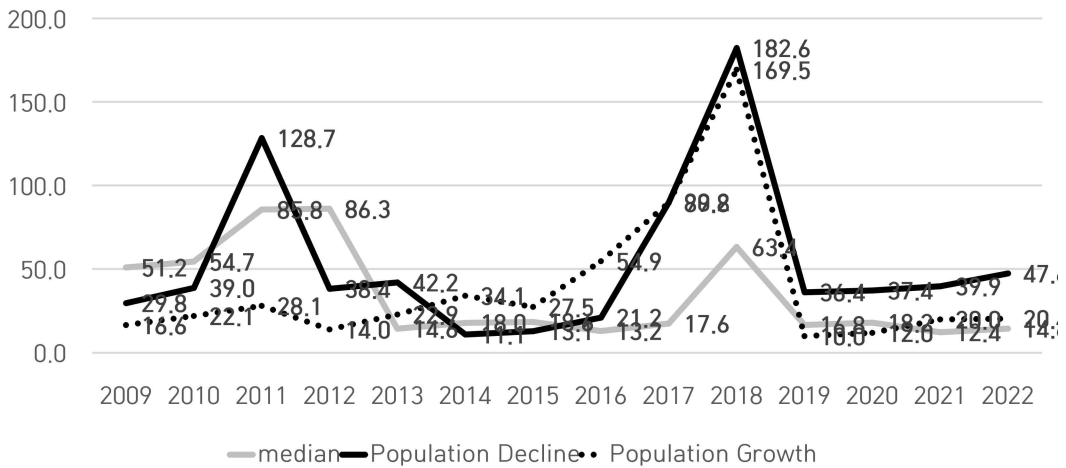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특·광역시)	1.89	1.79	1.85	1.91	1.67	1.65	1.65	1.66	1.67	1.65	1.62	1.36	1.19	1.13
2 (도)	3.95	3.36	1.99	2.08	2.17	2.34	2.50	2.86	3.01	3.13	2.98	2.64	2.03	1.82
3 (50만 이상 시)	12.49	12.31	7.14	6.76	9.16	10.21	18.65	248.54	476.27	1119.18	3.51	5.67	2.81	7.36
4 (50만 미만 시)	14.98	21.95	32.48	46.70	5.00	5.44	7.30	8.85	115.21	228.33	5.19	1.43	2.28	2.60
5 (도농복합시)	5.60	8.44	12.48	6.16	4.15	6.08	7.52	8.94	23.48	70.33	4.65	5.62	20.44	6.77
6 (5만 이상 군)	4.35	7.90	10.93	10.35	21.01	34.21	12.91	20.79	88.99	128.53	83.25	88.88	95.78	110.59
7 (5만 미만 군)	5.80	2.77	3.06	3.99	5.25	11.95	10.58	7.62	5.47	44.39	8.05	9.32	10.89	14.76
8 (특별시 자치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 (광역시 자치구)	153.25	182.00	430.48	210.07	120.71	57.52	65.89	33.57	40.90	53.05	38.84	41.61	31.54	45.47

## 2. 인구감소 유형별 지방부채 비교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인구감소형, 중간형, 인구증가형으로 구분하여 지방부채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세 가지 유형 중 지방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인구감소형이다. 반면, 인구증가형은 2009년에는 지방부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후 지방부채 수준이 점차 높아져서 2017년과 2018년에는 인구감소형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난 후 2019년 이후부터 지방부채 수준이 다시 낮아졌다. 이에 비해 중간형은 200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가장 낮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인구감소형에서 지방부채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인구증가형에서 지방부채가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방부채는 중간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시기가 더욱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인구감소형과 인구증가형 지방부채 평균 비교



〈표 7〉 인구감소형과 인구증가형 지방부채 평균 비교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간형	51.2	54.7	85.8	86.3	14.6	18.0	18.6	13.2	17.6	63.4	16.8	18.2	12.4	14.6
인구감소형	29.8	39.0	128.7	38.4	42.2	11.1	13.1	21.2	90.2	182.6	36.4	37.4	39.9	47.6
인구증가형	16.6	22.1	28.1	14.0	22.9	34.1	27.5	54.9	89.8	169.5	10.0	12.0	20.0	20.4

## 3. 집단 간 평균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감 유형을 인구감소, 중간, 인구증가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부채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인구감소형이며, 부채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은 중간형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구증가형은 인구감소형과 중간형 사이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구감소, 중간, 인구증가 그룹에 따라 부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1유형, 2유형, 6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인 1유형은 중간그룹의 부채가 가장 큰 2.25이며, 다음으로 인구증가 그룹이 1.55, 인구감소 그룹이 1.49로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인 2유형 역시 중간그룹의 부채가 가장 큰 3.35이며, 다음으로 인구증가 그룹이 2.35, 인구감소 그룹이 2.31로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만 이상 군인 6유형은 인구감소 그룹이 95.71, 중간그룹이 21.63, 인구증가 그룹이 17.40 순이다.

〈표 8〉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지방부채 평균 분석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df	F	Sig.
전체	중간형	1,092	34.66	233.50	집단 간=2 집단 내=3,399 합계=3,401	1.05	0.3489
	인구감소	1,330	54.11	371.85			
	인구증가	980	38.70	419.79			
1유형	중간형	14	2.25	0.35	집단 간=2 집단 내=95 합계=97	13.13	0
	인구감소	42	1.49	0.61			
	인구증가	42	1.55	0.41			
2유형	중간형	42	3.35	1.73	집단 간=2 집단 내=137 합계=139	6.28	0.0024
	인구감소	56	2.31	1.05			
	인구증가	42	2.35	1.94			
3유형	중간형	42	7.53	6.28	집단 간=2 집단 내=207 합계=209	1.03	0.3577
	인구감소	84	99.41	421.22			
	인구증가	84	243.26	1,399.92			
4유형	중간형	56	5.69	7.98	집단 간=2 집단 내=361 합계=363	1.1	0.3352
	인구감소	168	64.05	497.93			
	인구증가	140	13.30	70.25			
5유형	중간형	98	21.17	71.38	집단 간=2 집단 내=473 합계=475	1.47	0.2301
	인구감소	168	15.94	85.38			
	인구증가	210	8.24	38.38			
6유형	중간형	154	21.63	77.89	집단 간=2 집단 내=501 합계=503	3.1	0.0458
	인구감소	210	95.71	514.63			
	인구증가	140	17.40	89.18			
7유형	중간형	280	15.97	90.83	집단 간=2 집단 내=641 합계=643	2.15	0.1169
	인구감소	238	6.83	26.42			
	인구증가	126	4.15	6.47			
9유형	중간형	196	138.60	521.87	집단 간=2 집단 내=613 합계=615	1	0.3692
	인구감소	266	106.27	507.64			
	인구증가	154	70.02	149.41			

\*8유형은 부채가 없어 제외함

위의 집단 간 평균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형, 중간형, 인구증가형 간 지방부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평균 자체를 비교하면 인구감소형-인구증가형-중간형 순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유형, 2유형, 6유형만이 세 그룹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는 부채 수준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인구감소형이 가장 높은 지방 부채 수준을 보이고, 인구증가형이 가장 낮은 지방 부채 수준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6유형을 제외하고는 중간형의 지방 부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인 1유형과 2유형은 인구감소형보다 중간형의 부채 수준이 높아,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 규모가 부채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유형은 5만 이상 군 유형으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형의 부채가 가장 높고 3그룹 간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가설로 정리한 것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설에 따라 정리해보면, 가설 1의 경우 기각, 가설 2의 경우 부분채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설 1은 인구감소 지역의 부채가 다른 지역의 부채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정리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인구감소형보다 중간형의 부채가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설 2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증가 지역 간 지방정부 부채 차이를 보일 것이라 정리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인구감소 지역 및 인구증가 지역 간 지방정부 부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검증 결과
인구감소는 국가 부채와 지방 부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는 다른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기각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증가 지역 간 지방정부 부채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부분채택

## VI. 결론

이 연구는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의 추이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241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 추이 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간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 모두 증가해 왔으며, 국가 부채에 비해 지방정부 부채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둘째, 2022년 기준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1유형과 2유형이며,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5만 이상 군인 6유형과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인 5유형, 5만 이상 군인 6유형, 5만 미만 군인 7유형은 2009년 대비 2022년에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원분산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구감소, 중간, 인구증가 그룹에 따라 부채 평균값이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1유형, 2유형, 6유형이며, 대부분 중간그룹이 가장 높은 부채 금액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국가 예산 구조의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국가 부채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가 부채 수준이 지방정부 부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해왔다. 둘째, 인구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크게 증가한 유형은 도농복합시인 5유형, 5만 이상 군인 6유형, 5만 미만 군인 7유형, 광역시 자치구인 9유형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셋째, 인구감소형에 비해 중간그룹이 더욱 높은 부채 금액을 갖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기 때문에, 중간그룹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인구감소형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향후 재정 건전성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반면, 중간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제는 국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의 추이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정부 부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인구감소와 부채 간 연관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인구감소와 지방정부 부채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바탕은 물론 지방정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부족하나마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정부 부채 간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지방정부 부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부채가 재정건전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는데, 재정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측정한다(윤태섭·배정아, 2016). 이 연구에서는 이 중 예산대비채무비율만을 활용했다는 데에서 한계를 지닌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정부 부채 간 인과관계 및 지방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연구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영주·문명재. (2015). 재난관리 조직의 협력수준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3(3): 83-116.

- 김이경·김갑성·박병선. (2012).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조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4): 279-303.
- 김이경·유수정·김미정. (2009). 교사의 근무시간 내·외 직무부담 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4): 87-108.
- 윤석완. (2009).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4(3): 41-71.
- 윤선일·김정숙. (2022). 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45-76.
- 윤영진·김경도. (2012).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31(1): 229-250.
- 윤태섭·배정아.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 「한국지방재정논집」, 21(1): 73-100.
- 이승중·윤두섭. (2005).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개념화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3), 5-24.
- 정성호.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이전수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7(2): 219-245.
- 정솔·김정숙. (2023).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57(1): 143-176.
- 정주원·이아라. (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 31(3): 61-87.
- 최영출(2003),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지방행정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2,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재명. (2022).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145-174.
- 허명순. (2003). 지방정부의 부채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 뉴저지주 주민투표 요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 뉴저지주 주민투표 요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4(2), 15-27.
- 황규선·권승. (2005).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1(4): 37-56.

김정숙(金正淑):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법정협회의 책임성 영향요인 연구: 과정 책임성과 결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2018)를 취득하고,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비영리조직, 지방재정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23), “What Determines the Revenue of Development NGOs in South Korea?: Exploring Differences between Revenue and Age Groups”(2023), “An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id Allocation by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2021) 등이 있다.(jskim79@chungbuk.ac.kr)

## Abstract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Debt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Kim Jungso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rends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ebt and analyze local government debt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241 local governments from 2001 to 2022, and time series trend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national debt and local government debt have increased over the past 20 years, and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debt is not that large compared to national debt. Second, as of 2022, the types 1 and 2 metropolitan autonomous bodies have the lowest debt-to-population ratios overall, while the types 6 military with over 50,000 personnel and the types 9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have the highest debt-to-population ratios. Lastly, the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howed that when categorized by type of local government, the types that showed differences in average debt valu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decline, middle, and population increase groups were types 1, 2, and 6, and the middle group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amount of debt.

Key Words: declining population, local government debt, type of local government